

티벳 시위, 중국의 대외역량 시험무대가 될 것인가?

이동영
(계명대학교 중국학과 강사)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발생한 이번 티베트 독립 시위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외교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티베트의 시위는, 순조롭지만은 않을 앞으로의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하기 시작한 ‘해외로의 진출(走出去)’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과 위에서 개최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적 단결과 함께 대외적 위상의 개선을 통해, 대외 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은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이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대기오염 등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베이징 올림픽에 흠집을 내기 위한 발언과 시도들을 심심찮게 내어놓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 ‘독립’을 주장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위의 발전양상,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식, 베이징(北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향후 중국의 대외적 위상은 물론이고, 중국 대외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959년과 1989년에 이어, 20년 만에 발생한 이번 시위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티베트인의 주변화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티베트인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것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을 목전에 둔 시기적 상황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티베트를 재점령한 이후, 중국 정부는 가장 먼저 캄과 암도 지역을 각각 쓰촨(四川)성과 칭하이(青海)성에 편입시켰으며, 지금의 라사(拉薩)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만을 시짱자치구(西

藏自治區)로 지정하면서 티베트를 분할·관리해 왔다. 이후 한족(漢族) 이주정책을 추진한 결과 1964년부터 1982년까지 티베트인의 인구증가율이 73.44%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시기 이 지역에서의 한족 증가율은 121.2%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티베트인과 한족과의 결혼 권장 정책, 중국어 사용을 핵심으로 한 한족 문화의 보급, 서남공정(西南工程)을 통한 티베트 역사의 중국사 편입 등과 같은 일련의 한화(漢化)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티베트 문화의 파괴 및 티베트인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이 심화되면서 티베트인들의 위기의식은 증가하였다. 더욱이 지난 2006년 칭짱(靑藏) 철도가 개통되면서 위기의식과 함께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개통으로 인한 현지 소수민족의 주변부화의 문제는 난신장(南新疆) 철도의 개통이 좋은 사례이다. 우르무치와 카슈가르를 연결하는 총 연장 1500km의 난신장 철도가 개통된 것은 2001년이다. 철도개통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한족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이후 카슈가르의 상권은 한족이 장악했으며, 시 중심지의 인구 비율에서도 한족이 현지 위구르족을 넘어 섰다. 칭짱 철도의 개통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칭짱 철도 개통 이후 5년 이내에 약 520여 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라싸 현지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 속에서 한족 문화의 급격한 유입과 함께, 티베트 고유의 전통문화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면서 티베트인의 한족화 역사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 『홍콩경제일보』는 “칭짱 철도가 티베트 독립세력을 억제하고, 티베트를 한족화 시키기 위해 중국이 들이대는 ‘칼’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앞서 두 번의 시위에 비해 몇 가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과거 두 번의 시위가 라싸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이번 시위는 라싸를 중심으로 인근의 쓰촨, 칭하이, 간쑤(甘肅) 성은 물론이고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발생하는 등 지역적 범위가 상당히 확대됐다. 이처럼 시위 지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 방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과감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충돌의 범위가 그만큼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 속에서 기타 소수민족의 행동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이번 시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사건 초기부터 “시짱 청결공정”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사태수습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티베트 임시정부 내부에서의 의견 대립이 과거에 비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60여 년 간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평화운동 중심으로 진행됐던 티베트 독립운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비폭력·평화노선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달라이

라마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중국 정부가 사건 초기부터 이번 시위의 주동자로 달라이 라마를 지목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놓음으로써, 달라이 라마의 입지를 더욱 좁혀 놓았다. 그 결과 만약 이번 시위의 진압 과정 중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경우, 무력 저항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향후 시위의 발전방향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중국-인도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 과거 중-인 국경분쟁으로 인한 양국관계의 경색은 티베트 임시정부가 인도정부의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최근 중-인 양국 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며,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본격화될 경우, 티베트 임시정부는 오히려 인도 정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할 수도 있다.

넷째, 국제사회의 반응 또한 과거와는 달리 사뭇 신중하다. 두 번째 시위가 발생했던 1989년 당시에 비해 현재의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4위라는 경제규모와 함께,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대 소비시장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보이고 있는 대규모 국내 투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들 국가들이 대 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서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았으면 이미 올림픽 불참 가능성 발표와 같은 방식을 통해 중국에게 평화적 해결을 압박했겠지만, 올림픽 개최식 불참이라는 다소 모호한 차원에서의 대응방안만을 내놓았을 뿐(현재까지 이마저도 단순 의견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서 잠깐 티베트가 중국에게 가지는 정치·경제·군사적 가치와 올림픽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검토해 봐야 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우라늄을 포함해 약 70여종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전체의 수자원 중 30%가 이 지역에 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삼림자원 규모는 중국 5위에 달한다. 군사적으로도 티베트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티베트를 경계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를 위시해 14개국에 이른다. 특히 이 점은 다른 소수민족 주거 지역도 유사한 상황이다. 따라서 티베트가 독립해 나갈 경우 일단 쓰촨성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군사전략 상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이번 시위를 온건하게 처리할 경우 그 여파가 기타 소수민족에 미칠 수 있게 되며, 이는 중국 국내의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올림픽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올림픽 개최가 무산될 경우 중국은 대외 이미지의 실추를 경험하겠지만, 오히려 이를 내부 단결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달라이 라마라는 공적(公敵)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물론 올림픽 개최 무산이 중국 경제 전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이것

은 “티베트 사태의 악화 → 중국 정부의 강경진압 → 올림픽 개최 무산 → 상당 기간 대외관계 및 대외무역의 악화 → 경기 둔화 → 경제 붕괴 → 정권 위기”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려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위를 강경진압하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그렇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에서, 이번 티베트 시위와 관련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앞서 언급한 변화들 중 마지막 네 번째이다. 지난 3월 22일 친강(秦剛) 외교부 부장은 세계 100여 개국이 이번 사태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국가가 없어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다. 이는 그동안의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자율적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번 사태는 중국의 외교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 단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소비시장을 포함)의 위력을 중국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시험해 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티베트 사태가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해결되고, 비록 약간의 상처를 입더라도 베이징 올림픽이 무사히(?) 개최된다면,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이 어떻게 외교관계에 투사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향후 국제관계에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번 티베트 사태는 한국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수교 이전에야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수교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특히 최근 들어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북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만약 이번 사태가 악화되고,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며 이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해 올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라크전에 참전하였듯이,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라도 과감히 미국의 요구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할 것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진짜 개막식에만 참석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렵더라도 선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함은 분명하다. 확실히 어려운 선택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태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 단적인 예로 최

근에 발생한 버마(미얀마) 사태를 들 수 있다. 자국의 정치적 문제로 한국에 망명을 신청한 버마인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실용외교**를 실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물론 외교당국자들은 그런 원칙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고 개선을 요구하겠으며,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티베트 시위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대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2008/03/24)

